

2026학년도 11월 다람쥐 모의평가 주요 문항 해설지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빠른 정답

번호	정답	배점									
1	㉔	2	6	㉑	2	11	㉓	3	16	㉓	2
2	㉔	2	7	㉒	3	12	㉕	2	17	㉑	3
3	㉑	2	8	㉓	2	13	㉑	2	18	㉓	2
4	㉑	3	9	㉑	3	14	㉑	2	19	㉑	3
5	㉓	3	10	㉕	3	15	㉕	3	20	㉒	3

총평과 메시지

[예상 등급컷]

1등급	2등급	3등급
45	42	37

[시험지 컨셉]

- 9월 모의평가에 비해 상위권 변별 문항 개수를 늘림으로써 전체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구성하였습니다.
- 평가원이 최근 사회탐구 전반에서 독해력을 기반으로 한 고난도 문항을 출제하는 만큼, 이러한 경향성에 맞추어 텍스트의 양과 정보량을 늘리되, 자료의 의도는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4번, 15번 등 기존 평가원의 경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선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여,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당혹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10번, 15번 등 평가원이 변별력 있는 시험을 위해 형법 단원에서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수능특강 기본 개념을 활용해 선지를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항을 출제하였습니다.
- 19번, 20번 등 최근 기출에 출제된 문항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새로운 느낌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기출의 내용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

안녕하세요, 윤준수입니다.

교육 격차의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모의고사를 제작하여 배포한지 어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의 1/6을 오르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다는 사실이 대단히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스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목표를 가슴에 품고, 사교육을 증오했던 19살의 저는, 24살이 되어 ‘시대인재’라는 대형 학원의 재종반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아이러니함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 있었다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많은 면에서 변화한 저이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했던 이 다짐은 꾸준히 저를 성장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다지 위대하고 또 멋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똑같이 수험 생활을 지내보았던 제가 6년 간의 변화를 겪으며 느낀 것을 공유하자면 생각보다 일이 잘 되더라도, 또는 생각보다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굳은 다짐을 잃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좋은 기회가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결과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정 바라는 바를 위해 실천을 지속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인정받고 또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굳은 다짐과 함께 결국 원하는 바에 도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올해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주요 문항 해설

4 정치 참여 집단

정답 ①

해설

- ㉑ 같은 이익 집단에 가입하였고 같은 시민 단체와 정당에 가입하였으며, 병은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에 가입하였다.
- ㉒ 따라서 갑과 병이 가입한 A는 이익 집단, 을과 병이 가입한 B는 시민 단체, 을만 가입한 C는 정당으로 확정된다.

정답 풀이

- ① 이익 집단의 활동은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 ③ 정당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④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므로, 해당 질문을 통해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를 구분할 수 없다.
- ⑤ 모든 정치 참여 집단은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므로, 해당 질문을 통해 시민 단체와 정당을 구분할 수 없다.

5 전형적인 정부 형태

정답 ③

해설

- ㉑ t~t+3 시기 중 정부 형태는 2회 변경되었으므로, t 시기와 t+3 시기의 정부 형태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 ㉒ t 시기에 전체 의석 300석 중 A당의 의석수가 B당과 C당의 의석수 합과 같으므로, A당의 의석수는 150석임을 알 수 있다. 한편, B당의 의석수는 C당의 의석수의 2배이므로, B당의 의석수는 100석, C당의 의석수는 50석임을 알 수 있다.
- ㉓ 한편, 의석을 변화와 총의석수를 고려할 때, 시기별 A~C당의 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t 시기	150	100	50
t+1 시기	120	120	60
t+2 시기	90	180	30
t+3 시기	180	90	30

- ㉔ t+2 시기와 t+3 시기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다르므로, 해당 시기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로 확정된다. 한편, t 시기와 t+3 시기의 정부 형태가 같으므로, t 시기의 정부 형태도 전형적인 대통령제로 확정된다.
- ㉕ 한편, t+1 시기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시기여야만 정부 형태 변경 횟수 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t+1 시기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로 확정된다.

정답 풀이

- ③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t+1 시기에 행정부 수반은 정책 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㉑은 ㉒의 -2배이다.
- ② A당의 의석수는 t 시기에 150석에서 t+3 시기에 180석으로 더 많다. 그러나, C당의 의석수는 t+1 시기에 60석에서 t+2 시기에 30석으로 더 적다.
- ④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한 t+2 시기와 t+3 시기 모두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t~t+3 시기 중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t+1 시기에는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다.

9 헌법 재판소

정답 ① (ㄱ)

정답 풀이

ㄱ.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기각 결정하였다. 따라서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갑에 대한 감사의 기소 처분은 유지될 것이다.

오답 풀이

- ㄴ. ㉠은 ○○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즉, ㉠은 을에 대한 형사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다.
- ㄷ.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어 청구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다만,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법률에 대해 청구한 심판으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한다.

10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제도

정답 ⑤

정답 풀이

⑤ 피해자인 병은 정에 대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정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사 기관이 진다.
- ② 갑은 을에 대한 상해 혐의로 인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으므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1심 법원이 정의 보석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기존에 발부된 구속 영장의 효력은 소멸된 것이 아닌 정지된 것이다.
- ④ 1심 법원은 정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형 선고의 실효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결이다.

15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정답 ⑤ (ㄱ, ㄴ, ㄷ)

유의하자, 개념! '소년법상 보호 처분 ≠ 보안 처분'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동시에 부과될 수 없는 반면, 형벌과 보안 처분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기출 선지로서, 언뜻 보면 소년법상 보호 처분과 보안 처분이 아예 구분되는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학술적으로나 교과서 서술로나 보안 처분의 일환이므로, 두 개념이 온전히 다르다는 착각은 버리자.

REF1) 2026 수능특강 117p 보안 처분의 종류 '보호 관찰' 중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REF2) 미래엔 정치와 법 교과서 156p '사회 방위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이나 가정 폭력 행위자 등에 대해 가하는 보안 처분으로 현행법상 소년법.. 등에 따른 보호 처분 제도가 있음'

정답 풀이

- ㄱ. 갑은 △△법 제1조가 개정되기 이전인 2024년 6월에 폭행하였으므로, 개정 이전 △△법 제1조를 적용받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선고받을 수 있다.
- ㄴ. 보안 처분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병은 제정된 □□법 제1조를 근거로 가정 법원 소년부로부터 보호 관찰 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다.
- ㄷ. <보기> ㄴ 해설과 동일

19 가족 관계와 법

정답 ①

유의하자, 기출!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복기

9월 모의평가에서는 이혼의 유형과 관계 없이 양육권자는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이 원칙임이 출제되었다. 양육권의 협의 여부에 대하여 물었다는 것은 이와 유사한 개념인 친권의 협의 여부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의 협의 여부를 잘 살피자.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만 두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점 유의"

양육권 : 이혼의 유형과 관계 없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 원칙
친권 : 협의상 이혼은 협의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직권 지정하는 것이 원칙임.

정답 풀이

- ①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민법에 따라 별도의 협의 없이 친권자를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협의상 이혼과 구분되는 재판상 이혼의 특징으로, 갑과 을의 이혼이 재판상 이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오답 풀이

- ② 갑과 을이 이혼한 후, A에 대한 거소 지정권은 친권자인 을이 가진다.
- ③ 병이 B를 인자하지 않은 경우, 병과 B 사이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동시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된 자로서 친족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을은 B를 입양하지 않았으므로, 을과 정의 법률혼 여부와 관계 없이 을과 B 사이에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 ⑤ A가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 을과 정은 모두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20 선거 결과 분석

정답 ② (ㄱ, ㄷ)

해설

- 갑국 의회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이 모두 선출된다. 이때, 100개의 선거구에서 동일한 인원만큼 당선자를 결정하므로, 지역구 의원이 200명이면서 비례 대표 의원이 100명이거나, 지역구 의원이 100명이면서 비례 대표 의원이 200명인 경우 중 하나이다.
- 만약 지역구 의원이 100명이면서 비례 대표 의원이 200명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때, E당의 경우 정당 투표 득표율이 2%이므로 비례 대표 의석수가 4석이 되어야 하지만, E당의 총의석수는 2석이므로 자료와 모순된다.
-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이 200명이면서 비례 대표 의원이 100명인 선거 제도를 갑국 의회가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100개의 각 지역구에서 2명씩 당선자를 결정하므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이에 따라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 대표 의석수를 파악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지역구 의석(석)	103	75	12	10	0
비례 대표 의석(석)	27	43	18	10	2
총의석수(석)	130	118	30	20	2

정답 풀이

- ㄱ. 갑국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석 200석 중 A당은 103석을 차지하여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다.
- ㄷ.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법률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이때, A당과 B당이 모두 의결에 출석하면 출석 요건을 충족하고, A당과 B당의 의석수 중 A당이 차지한 의석수가 과반을 차지하므로, ㉠은 의회에서 가결될 것이다.

오답 풀이

- ㄴ.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투표율은 70%이고, A당과 B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의 합 또한 70%이다. 따라서 전체 유권자 중 49%가 정당 투표에서 A당 또는 B당에 투표한 것이므로, 유권자 중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 ㄷ. 현행 지역구 선거의 선거구 제도는 중·대선거구제이므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유권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